

선거 패배 반성부터 한일관계까지 민감 현안 정면 돌파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지난해 국민임명식 넥타이 착용 165분 동안 총 21개 질문에 대해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 생각”

지난 4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의 넥타이를 매고 기자들 앞에 앉았다. 흰색 바탕에 하늘색 줄 무늬의 이 넥타이는 지난해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 착용한 것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65분(2시간 45분)의 시간 동안 지방선거 결과,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대북정책, 한일관계, 중동전쟁 등 이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한’ 가 킴은 농담을 섞은 대답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0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165분 동안 21개 질문에 대답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정치 중립이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선거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후 국정 운영을) 열심히 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민이 버리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죽을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선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운명을 놓고 수천만명이 고민하는 상황에서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탄 마음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각과 여당의 겸손한 자세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본다. 여당은 그릇이 돼,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통합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 과격할 표현을 하거나 사상 검열,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예한 이슈였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게 꽤 많으니,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휘하는 검정이 수사할 수 있지만,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어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선 “육해공 한 게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지적 한번 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는 ‘주먹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주먹질에 맞아 다친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필요에 의해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완전히 협력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신 안 때리게”라고 해야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해야 해?라고 하면 마음이 통하겠느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있는 정서”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기자들의 질문에는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진다”고 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해당 질문은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 소득 격차 및 계급 고착화 해결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방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를 섞어서 동시에 타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청년·지방균형 정책을 설명했다. 다만 마지막으로는 “이야기해봐야 똑같은 정책 나열이라 화날 것 같아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마칠 것”이라며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는 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1면 ‘내달 부동산세’서 계속

李 “주가 아직도 저평가 주가가 환율인상 이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전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을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스피)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환율에 대해 “(주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으로 갈리는 초과세수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일관적인 세수로 분류해 재정 지출에 쓰는 방법에 대해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상황에서는 국가부채 상환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극찬 vs 국힘 혹평... 李 대통령 회견 엇갈린 반응

與 “탁월한 소통... 당도 응답할 것”
野 “국민 기만한 허황된 말잔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방침에 전폭적인 응답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허황된 말잔치”라며 깎아내리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2026년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함께 제시했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 의지가 돋보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소통 능력이 빛났다”며 “답변 내용도 모든 사안마다 해박한 지식과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두루 지닌 대통령의 면모를 느끼게 해줬다”고 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4가지 국정 목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는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기만한 허황된 말잔

치”라고 깎아내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선관위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게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위기인데 본인의 무수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약속을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며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반복했다”며

“국민은 장 보기가 두렵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데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단일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부와 시장 탓으로 떠넘기는 구차한 내로남불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의 말처럼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이라면 왜 지금까지 공급 확대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세금과 규제만으로 시장을 압박했나”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과 우리 기업, 국민 전체가 피땀 흘려 이뤄낸 ‘코스피 8000 시대’를 정권의 과실인 것처럼 가로챘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고환율에 대해 ‘주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고 말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4부 요인 한자리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개혁 공감대

李,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과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

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행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만큼, 4부 요인들이 모여 해법을 찾자는 것이 이날 만남의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 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4부 요인이 회동을 갖는 일 자체가 이례

적이라, 이날 회동에서는 이외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동에서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 등의 문제는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기형적인 구조 개선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다.

/서예진 기자